

“고유가 대책비 국고지원이 마땅”

한·시·도지사 정책협의회 건의 “농어업 면세유 작년 기준 상승분 차액 보전해야”



박준영(오른쪽 두번째) 전남도지사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주관으로 열린 16개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 참석,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전국 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고유가 대책비의 국고 지원과 고유가에 따른 지방 공공요금 안정 대책, 각종 지역현안사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가 고유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 일부를 지방교부세에서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의 국고 지원과 함께 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할 경우 나타나는 적자폭에 대해 일정 부분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적용하도록 촉구했다. 전남도는 구체적으로 ▲시내·외버스 사용 유류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농업용 면세유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방의 도시 가스 요금 안정을 위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한편 ▲농업용 및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경우 지난해 가격(농업용 : 672원/ℓ, 어업용 : 563원/ℓ)에서 상승한 부분의 차액을 보전하며 ▲화물차에도 농·

관련 전시회를 광주에서 열리도록 하고, 국비 9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또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 F1 특별법 조기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호남 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와 2012년 완공 등을 주문했다.

광주시도 이날 회의에서 LED 조명도시 조성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내년 10월 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도권에서 열리는

관련 전시회를 광주에서 열리도록 하고, 국비 9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또 한국민주주의 전당의 광주 유치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한 예산 지원도 부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인교통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약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는 시·도에 내려가는 교부세를 잘 활용해 공공요금 안정화에 노력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정초위원장, 정부 측에선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가족부 장관·기획재정부 차관, 시도지사협의회 측에선 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를 비롯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버스·택시요금 동결

전남지역의 버스·택시요금이 동결된다. 전남도는 13일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대중교통 공공요금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버스요금의 경우 통상 2년 주기로 인상을 추진해 왔던 점을 고려해 지난해 버스요금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 올 하반기에는 요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택시요금은 현재 택시업계에서 요금 인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 중이며 8월이나 보고서가 제출되면 도의 검증용역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올해 안에 요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국제선 요금 3~5% 인상

국토해양부는 13일 고유가에 따른 국내 항공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제선 유류할증료 변동 폭을 현재 16단계에서 33단계로, 17단계인 화물 유류할증료는 34단계로 확대해 여객은 다음달 1일부터, 화물은 다음달 16일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노선에 따라 3.4~5.7% 가량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이코노미석 기준 왕복 운임이 245만4천200원인 인천-로스앤젤레스는 254만7천100원으로 3.8% 오르고 72만8천100원인 인천-베이징 노선은 5.7% 오른 76만9천400원이 된다.

/연합뉴스

무등산 생태계 보전 청사진 만든다

광주시 새 ‘공원계획’ 용역

오는 2019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무등산의 생태계와 자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다.

광주시는 13일 소회의실에서 무등산공원위원회, 환경단체, 학계·전문가,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사)한국환경생태화학회가 시행하는 이번 용역은 현 공원구역(30.28km)과 용도지구 및 공원시설계획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원정비·훼손지 복원, 생태·자원 보존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에는 무등산의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공원 지역 확장 여부를 비롯해 이용객의 탐방성향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무등산에 있는 각종 방송시설과 군부대 등의 이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용역 과제에는 무등산의 지형경관과 지질, 식물상,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인문환경 및 역사·문화 관

경 등 자연자원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와함께 무등산 보전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등산 도립공원 타당성 보전·관리 계획 제안 카페’(cafe.daum.net/eco-mudeung)를 인터넷상에 구축했다.

시는 또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오는 2009년 10월에 완료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동영 기소유에 김현미 기소

작년 대선 ‘허위 유표’ 고소·고발

작년 대선 기간 여·야간에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유에 처분하고 김현미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은 대선 때 TV 연설과 야외 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한나라당 등에 의해 허위사실 유표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 정연주 KBS사장 소환

KBS 세고 소송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의 매일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조간간 정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정 사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2005년 진행된 법인에 등 부과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해 1천9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 500여억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아 회사 전 법무팀 직원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연합뉴스

시 설

미분양 대책 지방 ‘미분양’ 해소엔 미흡하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또 다른 미분양을 부추기고 신규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분양 대책이 기존에 발생한 미분양 물량에만 적용돼 12일 이후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혜택에서 제외돼 미분양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분양 해소책이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물량을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정부 대책대로라면 12일 이후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돼 미분양 발생 소지가 크다. 혜택이 전혀 없

는 신규 아파트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달 이후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아파트가 12만5천여 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취득·등록세의 50% 감면도 문제다. 취득·등록세가 감면되면 지자체의 세수는 크게 줄어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 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혀 지자체들이 벌써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실효성을 의문케 한다.

미분양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신규 발생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시키는 등 세제 혜택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면적으로 풀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장’보다는 ‘안정’ 정책 의지 확고히 해야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안정’으로 전환했다. 출범 이후 경제성장에 무게중심을 두어 왔으나 옛것에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성장을 접고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민생안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민생은 심각하다.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했고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선 52개 품목의 이른바 ‘MB 물가지수’는 6.7%나 뛰었다.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의 전망도 매우 어둡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경기가 어려워져 일자리를 잃는 것이 물가 상승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논리를 내세워 환율 인상을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려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경기

진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원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물가를 부추긴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끌어올린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물가를 압박한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물가 잡기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물가 안정 없이는 성장엔 ‘허울’이 불과하다.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생활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물가 안정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해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사회 전반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만연해진 임금과 제품값 등이 오르게 되고 그 결과 다시 물가를 압박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성장에 미련을 두어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정부, 봉하마을에 국가자료 온라인 차단 요청

정부는 13일 참여정부 직원들의 청와대 내부자료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e-지원(知圓)’ 시스템의 온라인 연결 차단을 공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3일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인 문용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팩스 공문을 보내 ‘e-지원 시스템’의 온라인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공문에서 “e-지원 시스템에 탑재된 국가 중요자료를 온라인에 연결해서 활용할 경우 보안유지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망에 연결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이 퇴임후 사자가 있는 봉하마을로 가져간 e-지원의 전자문서에는 국방, 외교와 관련한 국가기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웹 2.0’ 방식의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를 통해 국가기밀 문서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차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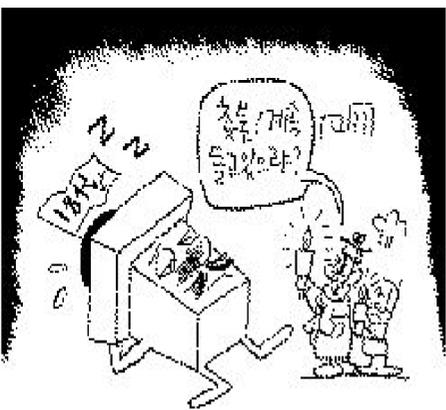


한국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가 13일 제주그랜드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9개 회원사의 발전방안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순복 경남신문 회장, 최승익 강원일보 회장, 이용길 매일신문 사장, 송승경 경인일보 사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제주일보=정기기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다자민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회2부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의만평

- 김중두



100일 채우기로 작정한 모양

수입 원자재값 84% 폭등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기록

수입물가 지수는 44.6% 뛰어

국제유가와 환율상승 등의 여파로 전반적인 수입물가가 크게 뛰고 있는 가운데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5월중 수출입 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입물가 총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6% 뛰었다.

이는 지난 1998년 3월(49.0%)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로, 1월(21.2%), 2월(22.2%), 3월(28.0%), 4월(31.3%) 등의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원자재가 상승률은 83.6%에 달하면서 관련 통계가 나온 1980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1980년 이전에는 원자재로 별도 분류한 통계가 없었지만 1979년과 1980년 오일쇼크 당시의 원자재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간재 수입가격은 지난해 5월에 비해 28.8% 올랐고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7.5%, 19.8% 상승했다.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수입물가 총지수가 10.7% 상승했으며, ▲원자재 17.0% ▲중간재 7.5% ▲자본재 3.5% ▲소비재 4.8% 등의 오르폭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전월보다 19.8% 오른 것을 비롯, 윤활유 19.7%, 휘발유 16.7%, 나프타 16.0%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